

각계 전문가가 제시한 방산 정책 방안

70년대 초 북한의 지속적 군사력 확장과 미국의 안보지원태세 변화로 태동한 방위산업은 기본병기
의 자급화를 달성하는 등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최근 국제질서 재편으로 인한 국방
비 삭감압력과, 軍소요 부족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미국의 제3국 수출 동의 부진에 의한 수출 곤란 등 방위산
업체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산소 호흡기를 꽂아 놓은 환자로 살수도 죽을수도 없는 가사상태에 빠진채 오직 자주국방의 사
명감이 생명을 이어주고 있다』는 방산업체 임원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올 한해 동안 방산 정책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제언을 아
끼지 않으신 각계 인사의 高見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그동안 바쁜 일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청탁을 수락
하시고 玉稿를 건네 주신 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편집자 주 -

자주 국방과 통일이지



朴 甲 壽

통일원 과장

최근 세계질서가 정치 이념과 군사 중심에서 경제 및 과학·기술 중심으
로 재편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안보논리와 앞으
로 추진될 통일논리가 자연스럽게 접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 및 통일 환경 방향을 설정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만약 북한이 오래전부터 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줄이고, 60년대 일부 개혁
세력이 제의한 가치개념의 화폐경제를 도입해서 수정노선을 채택하였다면 현
재의 남북한 위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북한이 국가파산의 경지에 임박해 가면
서도 군사역량에만 의존하여 군사카드로 대내외에 봉착한 각종 문제를 해결
하려 하면 더 큰 문제들과 비극이 수반됨은 필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북한 정책 결정 담당자가 오만하지 않도록 군
사적으로 확고한 방어태세를 갖추어 총체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민생·치안
문제를 포함하는 내치역량 증대와 함께 경제전과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겨룰
수 있는 과학문화 창달 및 고급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은 우리의 정신력과 과학기술로 안보를 뒷받침할 때 가능한 것이
지 외국의 성능 좋은 제품만 수입해서 사용한다면 언제까지나 의존국방 내지
중속국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생
산동원이 보장되어야 하고 통일전이나 후에라도 주변국들의 무력시위 또는
간섭에 대응 할 수 있는 자주방어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우리들은 독일이나 예멘의 통일보다 더욱 모범적으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
도록 통일이지를 다지면서 안보의 질을 내실 있게 높여 북한 스스로 무력불사
용 및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앞장서도록 국력과 통일역량을 신장시키
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7**

방산수요 감소에 따른 새로운 방산기반 정책 및 민수화



趙南熏

국방연구원, 연구원

냉전 체제의 붕괴는 방위산업 분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쳐 각국은 국제적 해빙 분위기에 따른 총체적 방산수요 감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강대국에 더욱 심각하여 방산기반 축소 및 민수화를 포함하는 방산구조 재정립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다소간의 방산기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런 현상은 특히 총포, 탄약 및 기동 등 기본병기 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상존하는 분쟁 가능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반의 무조건 축소는 불가능하며 방산구조의 재조정에는 방산동원능력 및 기술과급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생산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평균적으로 높은 방산업체의 방산점유 비율을 하향조정해 수요부족 및 변동으로 인한 업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휴 방산설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소요 책정 및 전략화 시기 결정시 방산기반을 고려하여, 소규모 물량 이나마 방산업체가 안정적인 조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軍需-民需 共用 기술을 식별하고 적극적 지원을 하여 향후 수요감소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미 발생된 유휴·설비 및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 여부를 세심히 평가하여 필수 설비 및 인력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1**

국내 항공산업 어디로 가는가?



李喜雨

공군전투발전단 공군중령
공학박사

항공 산업은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항공선진국에서 정부주도의 일관성 있는 계획아래 계열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산업은 그동안 철저히 나누어 주기식으로 형성되어 계열화나 전문화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 후속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축적기술의 활용 및 유지가 어려우며 국가적으로도 풍부한 개발경험에다 계열화된 사업구조를 가진 선진국과 대결할 만한 국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추진중인 중형항공기사업, KFP, UH-60, KTX-1&2 사업 등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어 제한된 항공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내여건상 인력난이 불가피하고, 더 큰 문제는 완료시기가 모두 2000년 전후로 집중되어 있어 어렵게 확보한 전문인력의 유지 및 활용방안이 난감한 실정이다.

국내 항공산업은 현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형수송기 개발은 심도있는 재검토를 거쳐 반드시 기개발계획들과 관련하여 개발착수의 시기와 개발기간을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납득키 어려운 시장예측등 무리한 경제성 논리만 내세우기 보다는 설사 경제성이 미흡하더라도 기술축적차원등 객관성 있는 논리와 현실적인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152**

우리나라 방위산업 한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李康晔

국방부 획득개발국
획득지원과장

현재 방산업체는 국내소요물량의 급격한 감축, 해외 수출의 정체, 첨단 기술 개발 능력의 부족, 방위산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투자이익의 상실은 물론 방위산업에 계속 참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회의론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침체의 늪으로 추락하게 된 몇가지 직·간접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지의 퇴조와, 국방연구 개발정책과 국가산업정책의 연계성 결여를 들 수 있다. 또한 방산제품 조달규모의 한계성과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軍의 무기체계 소요제기와 방산관련 계획의 수시변경과 국방과학연구개발 투자의 미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존재의 기로에 있는 방위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함께 위상을 재정립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안보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거 단순히 對北 억제전력 확보차원에서 추진해온 국방력 건설 목표도 성장한 국가경제력을 바탕으로 對북한은 물론 對 주변국의 위협까지 억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주국방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구성, 추진해야 한다. [防]

항공산업 추진체계 및 방향 연구



李載明

國科研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국내의 항공산업 전문업체는 항공 3社(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외에도 10여개 업체가 있으나 항공 3社에서 국내 생산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국내시장이 협소한데다 해외수출을 위한 산업체의 동시다발적 참여로 국가적으로 커다란 낭비요소를 안고 있어 전문·계열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民·軍 합동 감항인증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다.

항공산업은 단순 독립산업이 아니고 종합산업으로서 산업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결정 될 수 있다. 우리는 군용기와 민용기를 동시에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연구소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서별 이견을 조정하여 범국가적인 항공산업 정착수립이 가능한 항공산업기획단과 같은 정부의 기획통제 부서에서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 및 과거처 등의 의견을 조정통제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공산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

한국의 항공산업이 발전되어 국제경쟁력있는 군수용 및 민수용 항공기 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들을 종합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防]

한국의 국방예산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姜明吉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탈냉전 이후의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회 각 부문의 재정소요를 국방비 삭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비 운용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한 국방비 소요의 예산화 조차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특히 '93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억제됨으로써 향후 국방비 수준 결정을 위한 재정적 여건이 매우 제한적일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전력정비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소요 대비 예산 축소 배정으로 예산 관리 및 율곡사업 집행에 곤란을 겪고,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가 계속사업의 예산편성시 추가 부담 요인이 되며 기계화된 신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방예산도 정부재정의 일부분인 만큼 재정의 가용성, 재정운영계획의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운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국가안보의 최종적 수단인 군사력을 창출,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료와 같은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정국방예산은 결코 단기적인 남북관계의 흐름속에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민복지 수위의 충당을 위한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B]

美 제3국 수출승인제도에 관한 견해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한국 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방위준비협회(ADPA)는 韓·美 방산업체 간 협력사업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그동안 협력이슈와 협력의 장애요소에 대하여 韓·美간 광범위하게 토의되어 왔다. 그 가운데 반복 거론되고 논란이 많았던 의제는 제3국 판매에 대한 미국정부정책, 절충교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이었다.

한국업체의 관점에서 볼 때 절충교역분야는 주로 미국업체를 위해 적용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적용대상사업을 감소시킴으로써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제3국 판매분야는 계속적인 토론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6년간의 韓·美 군사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수출의 4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업체들이 국내수요 및 수출을 위한 방산품 생산을 위해 많은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한국 방산업체는 제3국 판매 수출 제도의 동의율이 저조함보다 오히려 잠재적인 사업기회의 상실을 초래하는 무응답 혹은 지연된 응답으로 더욱 곤란함을 겪고 있다.

결국 제3국 수출 승인 제도의 개선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美 정부의 승인과정을 단순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과 승인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일이다. [B]

제8차 방산특조법 개정에 붙어...



閔 晟 基

국방부 획득개발국 차장
공학·경제학박사

방산 물자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73년초에 제정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늘날까지 방위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고 최근들어 국방과학기술 개발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도모하고 인·허가, 계약 등 각종 제도의 실무적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8차개정을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심의회 운영을 하향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 생산설비 합리화 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질적 선진화와 민수산업과의 연계체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산물자 계약제도 및 적용범주의 구체화,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제도 신설, 품질보증체제 선진화, 대학 기초연구 활성화, 계약전 정부 품질확인제도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전향적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정책의 변화는 곧 제도와 규정의 발전으로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때, 본 방산특조법 개정으로 국내개발을 통한 방위산업 축진이 이루어져 주변 4강의 치열한 기술개발과 선진기술 이전 차단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 기술패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방산업체·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防**

韓·美 방산기술 협력의 발전방향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韓·美 안보관계 및 방산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지만, 방산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안보차원의 이해와 경제기술차원의 이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경제기술차원의 이해타산에 과도히 집착할 때에는 언제라도 마찰과 갈등이 커질수 있는 속성이 있다.

權 泰 榮

국방연구원 副원장
공학박사

방산기술협력의 다변화는 미국이 기술제공을 너무 규제하고, offset등 부대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정책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방산정책 다변화에 미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며, 미국의 장기적인 對韓 안보협력 관계인식은 통일이후까지도 거의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韓·美 양측이 공히 미래지향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고, 당장의 경제적 이익추구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미국은 방산시설 globalization에 대한 정의, 목표, 한계, 정책방향 등을 좀더 확고하게 설정하여, 한국의 방산능력을 신장하고, 건전한 분업 및 협업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사업 확충, 체계구성 부품급에서의 한국기여 증진, 제3국가 수출문제 해결, offset조건, 기술협력 등에서 양국간의 분업과 협업의 묘를 살리는 것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防**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文正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학 박사

국내 수요의 증족, 미국의 제3국 수출규제, 국제무기시장의 과당경쟁, 그리고 정부의 지원 결여 등 국내외적 변화는 국가안보의 초석인 방위산업을 급격히 사양화 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중적 위협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요, 다른 하나는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에서 오는 구조적 위협이다. 국가 안보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전략, 전술과 무기체계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기본병기 및 탄약의 경우는 아무리 비경제성 문제가 대두된다 하더라도 국내방산의 육성을 통해 독자적 생산획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사업과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높은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 획득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정책은 무기체계의 확보에 유익할뿐만 아니라, 민수분야에 파급효과를 주어 이와 관련된 성장, 첨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첨단기술의 수명주기가 단기화되고 있어 한국방위산업의 향후 진로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는 길은 2천년대의 무기체계 전문분야를 국내 연구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 선택을 통해 분업화하여야 할 것이다. **㉑**

최근 안보정세와 한국의 방산육성 방향



鄭 垸 昊

국방부 차관

우리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기업은 조립을 중소기업에서는 부품생산을 위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현재 653억 수준인 방산육성기금을 점차 증액하여 2,0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기타 예산을 합해 5,000억 정도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해외협력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많은 나라와 방산 MOU를 체결하여 첨단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넷째, 국방부의 조달업무 개선, 획득관련 규정상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각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처럼 분단상황도 아니고 방산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도 아니면서 정부가 방산에 깊숙히 관여하여 집중 육성시키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살펴볼때, 이제는 우리도 과거나 현재상황보다는 미래 상황에 초점을 두어 방산을 육성해야 한다.

한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국가발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력과 균형된 군사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방산분야 중점 육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㉒**